
라틴아메리카의 떠오르는 지역공동체, 태평양동맹

임태균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강사

핵심어: 태평양동맹, 지역공동체, 지역통합, 개방적 지역주의, 경제통합

I. 들어가는 말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4개국이 모여 2012년 6월 공식 출범한 태평양 동맹(Alianza del Pacífico)이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990년대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ún del Sur: MERCOSUR)으로 대표되던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은 2000년대 들어 남미국가연합(Unión de Naciones Suramericanas: UNASUR)과 볼리바르 동맹(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 ALBA)의 등장으로 짙은 정치색을 띠며 경제통합의 세계적 흐름과 상이한 길을 걸었다. MERCOSUR는 좌경화하며 보호주의로 선화하였고, 강경 좌파정부들이 주도하는 ALBA는 라틴아메리카의 자주적 연합을 강조하며 반 제국주의를 주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평양동맹은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4개국이 연합하여 기존의 라틴아메리카 지역통합체와 대조되는 세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2. 태평양동맹의 탄생

태평양동맹의 결성은 태평양 연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추진하던 태평양 아크(Arc of the Pacific)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식 명칭이 라틴아메리카 태평양 유역 주도권에 대한 포럼(Foro sobre la Iniciativa de la Cuenca del Pacifico Latinoamericano)인 태평양 아크는 2007년 1월에 콜롬비아의 칼리에서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등 11개국을 회원국으로 발족한 협력체로, 각국의 외교부와 통상 관련부서의 장관이 주도하여 개최하는 공개토론회였다. 태평양 아크는 참여국 간의 경제통상관계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목적이었으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였다.

태평양 아크는 통상 측면에서 통합, 투자 촉진 및 보호, 무역의 원활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및 기술 협력 등 모두 4개 분야를 중심으로 2010년 10월까지 여섯 차례의 장관급 회의와 2008년 한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Roldan, Perez-Restrepo & Garza 2011, 5). 미주개발은행이나 UN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ECLAC)와 같은 국제기구가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와 연구를 행했지만, 근 4년 동안 태평양 아크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사장되었다(Dade & Meacham 2013, 3).

태평양 아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사장된 시점에서, 태평양 아크의 구심

점을 이루던 4개국, 페루,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가 이번에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 즉, 다수의 라틴아메리카국가를 포함하는 폭넓은 공동체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 통합의 의지가 강한 소수의 국가들의 공동체인 태평양동맹을 발족한 것이다. 태평양 아크가 흐지부지되어 갈 무렵인 2010년 12월, 태평양 아크의 마지막 장관급 회담이 된 제6차 회담(페루에서 개최)에서 당시 페루 대통령인 알란 가르시아(Alan García) 대통령이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파나마 등 4개국 정상들에게 수준 높은 경제통합체(Area de Integración Profunda)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콜롬비아와 칠레가 멕시코를 이 공동체에 초대할 것을 건의하여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가 정회원으로서 참여하게 되었고, 파나마는 옵서버의 지위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에콰도르는 답을 하지 않았다(Secretaria de Economía de Mexico 2012). 이리하여 2010년 12월, 아르헨티나의 마르 델 플라타(Mar del Plata)에서 개최된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담 기간에 페루,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정상은 태평양동맹의 설립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자국의 장관들에게 통합체의 결성을 위해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2011년 4월 페루의 리마에서 4개국 대통령은 태평양동맹의 공식적인 제1차 정상회담을 열고 리마협약(Declaración de Lima)을 체결하여 공식적으로 통합의 비전을 발표하고 태평양동맹의 설립을 동의하였으며, 파나마는 옵서버국으로 참여하였다. 동시에, 4개국 대통령은 태평양동맹 기본협정문(Acuerdo Marco)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태평양동맹 기본협정문은 2012년 3월 화상회의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승인되었고, 2012년 6월 제4차 정상회담에서 서명됨으로써 태평양동맹의 공식적인 발족을 알렸다. 이로써 정회원 4개국(페루,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과 태평양동맹의 논의 초기부터 옵서버 지위를 인정받은 파나마, 3차 정상회담을 통해 옵서버로 가입한 코스타리카 등 2개국의 옵서버 회원으로 태평양동맹은 공식 출범하였다.

3. 태평양동맹의 구성과 주요 내용

현재 4개국 의회에서 태평양동맹 기본협정문을 비준한 상태인데, 2013년 5월 콜롬비아의 칼리에서 열린 제7차 정상회담 이후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시장 통합을 위한 협약 내용에 대한 협상을 마치고 2014년 2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제8차 정상회담에서 협약에 대한 서명을 마쳤다. 2014년 2월 현재, 태평양동맹의 정회원국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이며, 옵서버 국가는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파라과이, 우루과이, 에콰도르, 파나마,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캐나다, 한국, 터키, 중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핀란드, 모로코, 이스라엘, 인도, 싱가포르 등 총 30개 국가다. 한국은 2013년 7월 29일에서 30일까지 콜롬비아의 비야 데 레이바(Villa de Leyva)에서 열린 제8차 외교통상부 장관급 회담에서 옵서버 가입이 승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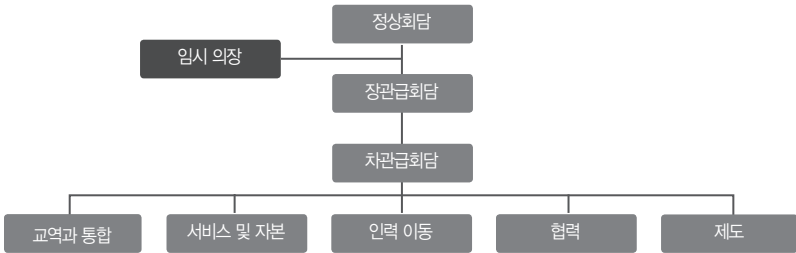
| 그림 1 | 태평양동맹 옵서버 국가(2014년 2월 현재)



자료 |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ifico) (2013a)

태평양동맹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정회원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시행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 회원국이 합의한 모든 협약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야 한다. 2013년 5월 칼리 회담에서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을 마무리 지은 코스타리카가 FTA 비준과 시행을 추진하면서 다섯 번째 회원국으로 태평양동맹에 정회원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 파나마도 태평양동맹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여섯 번째 정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2 | 태평양동맹의 조직도



자료 |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ifico) (2013b)

태평양동맹은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차관급 회담, 그리고 5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태평양동맹 정회원국은 알파벳순으로 돌아가며 1년씩 의장직을 맡게 되는데, 현재 2013년 6월 제7차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콜롬비아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정회원국의 대통령은 최소 6개월에 한 번꼴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장관급 회담은 태평양동맹의 주요 의결기관으로 정회원국의 외교부나 통상 관련 부처 장관 모임이며, 기본 협정문 및 각 정상회담을 통해 협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태평양동맹의 목적을 더욱 발전시키

는 핵심 기관이다. 차관급 회담은 정회원국의 외교부나 통상 관련 부처의 차관이 분과위원회에서 발전시킨 내용을 검토하고 차후 논의할 새로운 시안에 대해 평가하는 기관이다. 마지막으로, 분과위원회는 5개 분야(교역, 서비스 및 자본, 인력 이동, 협력, 제도)에 대한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가장 실무적인 그룹이다.

4. 태평양동맹 개별 회원국의 이해관계

태평양동맹의 기본 협정문에 따르면, 태평양동맹이 추진하는 통합은 크게 1) 시장 통합, 2) 사회 통합, 3) 아시아 진출로 구분할 수 있다. 상품과 서비스, 자본, 노동을 포함하는 라틴아메리카 역내 시장 통합을 이루고, 나아가 경쟁력을 갖추어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다. 개별 국가의 이익을 내세우기보다는 4개국의 공동 이익과 통합을 위해 협의와 양보를 통해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 회원국은 태평양동맹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멕시코는 태평양동맹을 통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동시에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존재감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멕시코는 1994년 NAFTA가 발족하기 전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일원으로서 역내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북미에 편입되었으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멕시코를 라틴아메리카의 일원으로서보다 북미의 구성원으로 여기며 다소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멕시코는 자국 경제의 지나친 대미의존을 우려하게 되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태평양동맹은 이

러한 맥락에서 멕시코에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며,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콜롬비아, 페루, 칠레라는 남미의 주요 3개국과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되찾으려고 한다.

콜롬비아는 태평양동맹을 통해 나머지 3개 회원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대아시아 경제 교류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페루와 칠레가 한국, 중국, 일본 모두와 FTA를 체결했으며, 멕시코도 일본과 FTA를 체결한 반면, 콜롬비아는 한국과만 FTA를 서명한 상태이며 아직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해, 아시아의 3개국과는 아직까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콜롬비아는 태평양동맹 4개국 중 유일하게 APEC의 회원국이 아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진출에 있어서 나머지 3개국보다 불리한 상황이다. 콜롬비아는 4개국 중 대한 수출액이 가장 적은 국가이기도 하다. 콜롬비아가 APEC 가입과 TPP 협상 참여에 대한 관심을 피력하고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콜롬비아는 태평양동맹을 통해 APEC 및 TPP 가입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칠레는 태평양동맹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물류 및 운반의 요충지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칠레는 개방과 국제화를 경제정책의 기본 노선으로 삼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진출의 경험이 아직 부족한 칠레 기업이 태평양동맹을 통해 인접국인 페루나 콜롬비아에서 노하우를 쌓고 후에 브라질 같은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의 거대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의도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칠레는 현재 아시아 국가와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지만 시장규모가 큰 아시아에 단독으로 진출하기에는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태평양동맹을 통해 아시아 진출의 여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태평양

동맹국 중 가장 개방적이고 무역에 활발한 국가로서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연결하는 범태평양 지역의 허브 역할도 기대된다.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가 각각 중요한 기대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가운데, 페루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목적에 기반을 두는 듯하다. 이는 태평양동맹의 발의국으로서 일반적인 태평양동맹의 목적에 페루의 다양한 이해가 담겨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태평양동맹의 다른 3개국이 보여주고 있는 FTA를 통한 개방의 수준이 페루의 개방 수준보다 더 높다는 것에 착안하여 태평양동맹을 통해 회원국과 교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와 칠레가 페루보다 멕시코와 더 높은 수준의 FTA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태평양동맹은 이러한 제도적 교역 환경을 동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El Comercio, 2013년 6월 21일자). 페루는 태평양동맹국에 대해 과수농업 및 섬유산업의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Omar Mariluz 2013). 칠레와 과수농업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페루와 칠레의 기후 차이로 수확 시기가 거의 겹치지 않기 때문에 공동 수출을 통해 아시아에 1년 내내 과일을 제공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5. 태평양동맹의 주요 특징

1) 경제 통합 및 구조적 측면

태평양동맹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은 FTA의 수준을 넘어선 공동시장 수준의 경제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공동시장을 추구한 경제공동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안데스공동체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같은 라틴아메리카 지역 공동체들이 공동시장이라는 기치 아래 발족했었다. 하

지만, 이들 기존 지역공동체는 사실상 공동시장과 거리가 멀어진, 실패한 공동시장의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태평양동맹이 기존의 경제공동체와 다른 점은, 앞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태평양동맹 정회원국이 이미 상호 간에 양자 FTA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롭게 태평양동맹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국가는 기존의 정회원국 모두와 양자 FTA를 먼저 체결, 발효해야 한다. 이는 기 체결된 양자 FTA를 통해 정회원국 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FTA보다 더 수준 높은 경제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태평양동맹이 회원국 간의 기존 양자 FTA를 대체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비록 궁극적으로 대체 효과가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기존 FTA는 여전히 실효성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태평양동맹은 기존의 양자 FTA와 공존하게 되는데, 태평양동맹에 의한 무역 조건과 양자 FTA에 의한 무역 조건 중 어느 것이 적용될 것이냐는 생산자와 수입업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는 국가가 태평양동맹이나 기존의 양자 FTA를 강제하지 않고 실사용자의 재량에 맡기는 형태로, 태평양동맹의 실효성에 의문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자와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관세 등의 무역장벽이 낮은 쪽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경제통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유효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현재 태평양동맹 회원국이 모두 양자 FTA를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투자 및 무역은 여전히 매우 낮다는 점은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태평양동맹을 통해 회원국 간의 무역 관세를 더욱 낮추거나 없앤다 해도 과연 얼마나 역내 교역이 증가할지는 의문이다. 물론 기존의 양자 FTA는 주요 농산물이거나 금융 서비스 같은 부문이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태평양동맹은 이러한 기존 FTA의 한계를 타파하려고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92%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8%에 대한 관세도 중장기적으로 철폐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8%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감 교역

상품인 농산품에 대한 개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는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그러하듯이 태평양동맹 4개국도 전통적으로 농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렇듯, 태평양동맹이 기존 양자 FTA를 넘어서는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민감한 부문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며, 자유화 수준의 심화가 공동체 내 교역량 증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태평양동맹은 공동체 외부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기존의 라틴아메리카 지역공동체는 일반적으로 공동체 내부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 왔다. 공동체 내의 무역장벽 철폐가 주요 내용이었고, 공동체 외부 진출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출범 당시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였던 MERCOSUR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본래의 가치를 잃고 폐쇄적인 공동체로 변하였다. 반면, 태평양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진출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있다. 물론 태평양동맹이 오직 아시아·태평양 지역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 무역 사무소를 터키에 두고 운영하고 있고, 공동 대사관을 가나와 모로코 등지에 설치하자고 합의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태평양동맹은 세계 각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를 위주로 한 아시아·태평양에 대한 태평양동맹의 관심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태평양동맹이 가까운 미래에 제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상황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태평양동맹의 내부적인 통합이 충분히 강화되면 제3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한 긍정적인 기반으로, 태평양동맹은 기업환경과 경제자유화에 있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4-1>과 <4-2>가 보여주듯이, 태평양동맹 4개국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기업환경(Ease of Doing Business) 지수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Index)에서도 4개국 모두 라틴아메리카에서 10위 이내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환경과 개방성은 태평양동맹이 지속적으로 공동체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의 기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태평양동맹의 외부에서 동맹 내부로 유입되는 투자에 대한 전망을 높여줌으로써, 태평양동맹이 성공적으로 개방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통합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준다.

표 1 | 기업환경 순위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

라틴아메리카 순위	국가	세계 순위
1	칠레	37
2	페루	43
3	콜롬비아	45
4	멕시코	48
6	파나마	61
13	우루과이	89
15	과테말라	93
18	파라과이	103
19	벨리즈	105
20	코스타리카	110
21	엘살바도르	113
24	니카라과	119
25	아르헨티나	124
26	온두라스	125
27	브라질	130
28	에콰도르	139
29	볼리비아	155
32	베네수엘라	180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 강조는 태평양동맹 국가

| 표 2 | 경제자유지수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

라틴아메리카 순위	국가	세계 순위	지수
1	칠레	7	79
4	우루과이	36	69.7
5	콜롬비아	37	69.6
7	페루	44	68.2
8	코스타리카	49	67
9	멕시코	50	67
11	엘살바도르	53	66.7
14	파나마	71	62.5
16	파라과이	79	61.1
17	과테말라	85	60
19	온두라스	96	58.4
20	브라질	100	57.7
21	벨리즈	102	57.3
22	니카라과	109	56.6
26	볼리비아	155	47.9
27	에콰도르	159	46.9
28	아르헨티나	160	46.7
29	베네수엘라	174	36.1
30	쿠바	176	28.5

자료 | Heritage Foundation

* 강조는 태평양동맹 국가

2) 제도화 측면

태평양동맹은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태평양동맹은 정치적인 이념을 배제하고 자유무역과 개방을 기치로 실질적인 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는 2000년대 들어 부상한 라틴아메리카 지역공동체들이 정치적 공동체의 특성을 띠는 것과 대조적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남미 정권의 본격적인 좌경화가 MERCOSUR의 정치화를 촉진시켰고, 베네수엘라가 주도하여 결성된 ALBA는 쿠바,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강성 좌파국가가 중심

이 되어 경제적인 협력을 도모하지만 태생적으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성향이 강하다. UNASUR는 남미의 EU를 표방하며 출발하였으나 회원국 간의 정치경제적 방향성의 차이로 이미 실효성이 매우 낮다. 기존의 주요 라틴아메리카 지역 공동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평양동맹은 정치적 이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국가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정치적 성향에 대한 선호 때문에 태평양동맹의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태평양동맹은 요식적인 제도화를 철저히 지양하는 제도적 최소주의(*institutional minimalism*)를 추구한다. MERCOSUR를 비롯한 많은 지역 공동체가 여러 가지 공동기구를 통해 회원국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는 것에 반해, 태평양동맹은 그러한 공동기구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며, 실사 그런 기구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로 이용할 의도가 매우 약하다. 현재 태평양동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식 공동기구는 협력기금(*Fondo de Cooperación*)이 유일하며, 이도 각국의 출연금을 관리하는 기능을 할 뿐 자금 활용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논의나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는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화된 상설 공동기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EU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공동위원회, 공동의회, 공동재판소와 같은 기구는 경제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van Klaveren 1993, 135*). 특히 분쟁조정기구의 부재는 공동체 내에 이견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장치가 없다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상설 공동기구의 설치와 이를 통한 공동체의 전개가 경제통합의 수순으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제도화된 공동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안데스공동체처럼 공동기구가 통합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요식적인 제도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van Klaveren*

1993, 135). 태평양동맹의 당사국은 상설 공동기구의 필요성을 낮게 생각하고, 과거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지역공동체가 공동기구를 설치하였으나 이들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의 진전이나 성과를 거둬내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태평양동맹의 제도화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공동의회(Comisión Interparlamentaria)와 이미 존재하는 경제인 협의회(Consejo Empresarial de la Alianza del Pacífico: CEAP)는 태평양동맹의 공식 기구가 아니다. 공동의회는 각 회원국 의회가 태평양동맹을 지지하며 자발적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기구로 태평양동맹의 공식적인 테두리 밖에 있으며, 경제인 협의회도 회원국의 주요 경제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태평양동맹이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기구는 아니다. 태평양동맹은 요식적인 제도화 대신 회원국 간 고위급 회담을 자주 개최함으로써 공동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4개국 정상은 2011년 4월 28일 페루의 리마에서 태평양동맹 결성에 합의한 제1차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014년 2월 10일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정상회담까지 모두 8차례 정상회담을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태평양동맹 협의 과정에서 경제인 협의회의 위상이다. 2012년 8월 29일 공식 발족한 경제인 협의회는 태평양동맹의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태평양동맹 정상회담 개최 시 현지에서 나란히 개최되는 등 1년에 적어도 2번의 모임을 가지고 있다. 경제인 협의회는 태평양동맹 회원국의 주요 경제인들의 모임으로 태평양동맹과는 별개의 안건을 논의한다. 보통 경제인 협의회는 통상과 관련된 실질적 편의를 위한 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 관련 법률이나 규제는 태평양동맹 회의에서 다루어지지만 의약품의 명칭에 관해서는 경제인 협의회에서 논의함으로써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경제인 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내용은 태평양동맹 공식회의에 반영된다. 지난 태평양동맹 제7차 정상회담에서는 4개국 정상이 선언문을 통해 기업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경제인 협의회의 결과와 권고사항에 대해 주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경제인 협의회의 활동에 대해 만족을 표하기도 하였다(Alianza del Pacifico, 2013c). 경제인 협의회는 태평양동맹이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으나 내용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이용자가 될 기업의 의견이 중요한 부분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태평양동맹의 실용주의 추구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각 회원국의 기업인이 직접 만나 논의하고, 논의 사항과 결과를 태평양동맹 정상회담에 제시함으로써 산업구조에 따른 국가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의 접점을 찾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3) 대내외 정치적 측면

태평양동맹의 제도적 최소주의 뒤에는 각 회원국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태평양동맹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에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제도화된 공동기구의 설치와 이를 통한 협약 논의 및 추진은 회원국에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현 태평양동맹 4개국의 대통령은 태평양동맹에 대한 논의 초기부터 태평양동맹을 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는데, 정부 간의 직접적인 회의를 통해 태평양동맹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여러 가지 공동기구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감소되었다. 태평양동맹의 전신인 태평양 아크 때부터 이들 4개국은 라틴아메리카 태평양 연안국의 경제통합에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태평양 아크가 회원국 간의 이해 문제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사장되자 마음이 맞는 국가만이 따로 뭉쳐서 경제통합을 추진한 것이다. 회원국 대통령의 강한 의지는 태평양동맹을 가속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추후의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통합 동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 신임 대통령의 경제통합에

대한 태도가 이전 정권과 다르면 지역공동체의 전개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좌파와 우파 간의 정치적 대결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태평양동맹은 정권의 교체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태평양동맹 회원국은 우파 또는 우파적 성향이 강한 중도좌파 정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우파와 좌파라는 정치경제적 성향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런 범주로 국가를 분류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태평양동맹 4개국은 정치적·경제적 자유화와 민영화를 추구한다. 특히, 친미적인 성향이 강하며 모두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현 태평양동맹 회원국의 정권을 살펴보면, 콜롬비아의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는 우파적 성향을 띠고 꾸준히 시장 지향적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 멕시코는 2012년 중도우파인 페냐 니에토(Peña Nieto) 대통령이 우파인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ón)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아 개방적 경제 정책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3월 정권이 교체된 칠레의 경우, 전 대통령인 세바스티안 피네라(Sebastián Piñera)가 중도우파 성향인데 반해 새 대통령 미셸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는 중도우파적 성향을 띠고 있다. 하지만 바첼레트는 과거 대통령 임기 당시 개방적·실용적 경제정책을 고수했으며, 이는 피노체트 이래 칠레 경제정책의 일반적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페루의 경우, 오안타 우말라(Ollanta Humala) 대통령은 좌파 성향의 인물로 2011년에 취임하였으나 실질적인 경제정책에서는 우파적인 시장친화 정책을 펴며 이전의 알란 가르시아 우파 정권의 정책 기초를 따르고 있다. 이렇듯, 태평양동맹은 각 회원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정권교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현 상황으로 볼 때 정권교체가 회원국의 태평양동맹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좌파의 득세로 특징지어지는 200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에

서, 태평양동맹 회원국들의 우파적인 성향은 태평양동맹의 개방적인 기조와 통합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태평양동맹은 대내외적인 안보 우려가 적어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화이팅은 지역 간의 정치·안보 우려가 적을수록 지역통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Whiting 1993, 22-23). 왜냐하면 지정학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공공의 적이 있으면 공동체의 역량이 상당 부분 분산되기 때문에 경제 통합의 진전이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Whiting 1993, 22-23). 대외 안보에 관하여, 태평양동맹국은 라틴아메리카 주변국과 중대한 군사적 또는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지 않다. 또한 현재 라틴아메리카 내에서 이들 국가들에 큰 위협을 가할 만한 군사·정치적 존재는 없다.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라틴아메리카를 넘어서 세계를 겨냥하는 비전으로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으며, 안보 문제에서도 주변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별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반미적 태도가 강하고 라틴아메리카 좌파국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친미 국가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 콜롬비아가 니카라과와 카리브 해에 있는 작은 섬들의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으나, 이것이 태평양동맹의 대외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도 태평양동맹은 회원국 간에 우려할 만한 안보 문제나 정치적 갈등이 없다. 이는 태평양동맹 회원국이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하거나 밀집해 있지 않은 덕분이기도 한데, 국경선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이민, 마약, 국경 관리 등 안보와 관련된 갈등에 대한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 칠레와 페루가 양국 국경에 접한 해안에 대한 영유권 문제로 오랜 논쟁을 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하여 내려진 판결을 따르기로 하는 등 영토문제가 정치화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칠레와 페루 사이의 영해 분쟁이 양국의 경제관계, 나아가 태평양동맹의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2012년 6월 공식 출범한 태평양동맹은 빠른 진보를 보이며 라틴아메리카 경제통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MERCOSUR나 ALBA와 같은 기존의 라틴아메리카 지역공동체가 예전의 위상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태평양동맹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라틴아메리카에서 최근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대외 개방성이 높은 4개국에 모여 발족한 태평양동맹은 회원국 간의 기존 양자 FTA의 수준을 넘어 역내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공동시장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제도화나 요식화를 지양하고, 각 회원국 정상의 강한 의지를 동력으로 통합에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태평양동맹은 기존의 라틴아메리카 지역공동체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처럼 전통적으로 농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이 향후 완전한 관세 철폐를 이루는 데 갈등의 소지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태평양동맹의 특징상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정형화에 치중한 기존의 라틴아메리카 지역공동체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한 점을 감안할 때, 태평양동맹이 라틴아메리카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Alianza del Pacífico. 2013a.
<http://alianzapacifico.net/paises-observadores-de-la-alianza-acompanantes-claves-en-el-proceso-de-integracion-regional/>
- Alianza del Pacífico. 2013b.
http://alianzapacifico.net/que_es_la_alianza/estructura-y-organigrama/
- Alianza del Pacífico. 2013c. Declaración de Cali.
<http://alianzapacifico.net/documents/cali.pdf>
- Dade, Carlo & Carl Meacham. 2013. The Pacific Alliance: An Example of Lessons Learned.
<http://csis.org/publication/pacific-alliance-example-lessons-learned>
- "Equipos de la Alianza del Pacífico se reúnen en Lima para liberar comercio" 2013. El Comercio. June 21.
<http://elcomercio.pe/economia/1593439/noticia-equipos-alianza-pacifico-se-reunen-lima-liberar-comercio>
- Heritage Foundation. 2013. 2013 Index of Economic Freedom.
<http://www.heritage.org/index/ranking>
- Omar Mariluz. 2013. "Peru targets Brazil and Pacific Alliance" Reuters. May 21.
<http://www.reuters.com/assets/print?aid=USBRE94K16M20130521>
- Roldan, Adriana, Camilo Alberto Pérez-Restrepo, and María del Mar Garza Agudelo. 2011. "Arco del Pacífico Latinoamericano y ASEAN: Oportunidades de cooperación birregional." Paper presented at XIII Congreso Internacional de ALADAA. (March 23 -25).
- Secretaría de Economía de México. 2012. Unidad de Coordinación de Negociaciones Internacionales.
http://www.economia.gob.mx/files/transparencia/informe_APF/memorias/6_md_alianza_pacifico_sce.pdf
- Whiting, Van R. Jr., 1993. "The Dynamics of Regionalization: Road Map to an Open Future?" Peter H. Smith ed. *The Challenge of Integration: Europe and the Americas*, pp. 22-23. North-South Center.
- World Economic Forum. 2013. 2012 Ease of Doing Business.
<http://www.doingbusiness.org/rankings>